

사회

외벽 균열 ... 38년만에 정밀 안전진단

옛 동구청 건물을 어찌할꼬

토지·건물 수 십명 공동 소유 이해관계 복잡

결과 나와도 합의 도출 난망...도심 흉물 우려

광주시 금남로 2가에 위치한 옛 동구청사 건물이 지어진 지 38년 만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고 있지만 복잡한 소유구조 때문에 재건축이나 개·보수 권고가 나오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건물이 자칫하면 '도심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

파라 보수공사나 재건축 또는 시설물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복잡한 소유구조>=광주시와 동구, 건물 입주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나 전면 재건축 권고가 나오더라도 이를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광주시와 법인, 개인 등 다수가 건물과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 건물은 현재 시와 (주)동양화재보험이 각각 24.4%, 35.4%를, 나머지는 개인 22명이

0.19%부터 최대 14.92%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한 토지는 광주시와 모 기업이 각각 32.3%, 23.2%를, 나머지는 21명이 0.1~14.0%씩 가지고 있다.

이번 안전진단 비용 4천만원을 광주시가 부담하는 과정에서도 시와 동구, 시 의회 간 마찰이 있었다. 안전진단 비용은 건물 관리주체인 시가 부담해야 하지만, 시 의회에서는 왜 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결과 관계없이 '굴뚝거리'>=광주시와 동구는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법을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보수를 권고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해관계자 모두를 설득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고, 이마저 여의지 않을 경우 또 시 예산으로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때 때문이다.

'정면 재건축 권고'가 내려지더라도 마찬가지다.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한 옛 동구청을 재건축할 경우 10~15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다 업종도 제한 없이 소유자들의 이해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유 구조가 너무 복잡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안전진단 결과가 어찌 나오든 재건축은 힘들 것"이라면서도 "선불리 재건축 운운했다는 개발이익을 기대한 소유자들이 저마다 자기 주장을 할까봐 더 큰 걱정"이라고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38년 만에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옛 동구청사. 총장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20여개의 사무실과 점포가 입주해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진단결과는 이달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새해 달력 없나요?

불황 여파 기업들 수량 대폭 줄여 품귀현상

인쇄업체 주문량 30% 줄어 '연말특수' 옛말

새해를 앞두고 달력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광주지역의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홍보용 달력의 수량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광주 A건설회사는 지난해 1만부의 달력을 제작했으나 올해에는 7천 부만 제작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의 경기를 반영했다는 게 A건설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B은행도 지난해에 비해 제작량을 2% 줄이기로 하는 한편, 달력 디자인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C기업은 지난해 탁상용·벽걸이용 달력과 수첩 세 가지를 제작해 고객들에게 연말 홍보용으로 나눠줬으나 올해는 달력을 제작하지 않고 수첩만 만들었다. 제작물량을 감소한 이유는 달력이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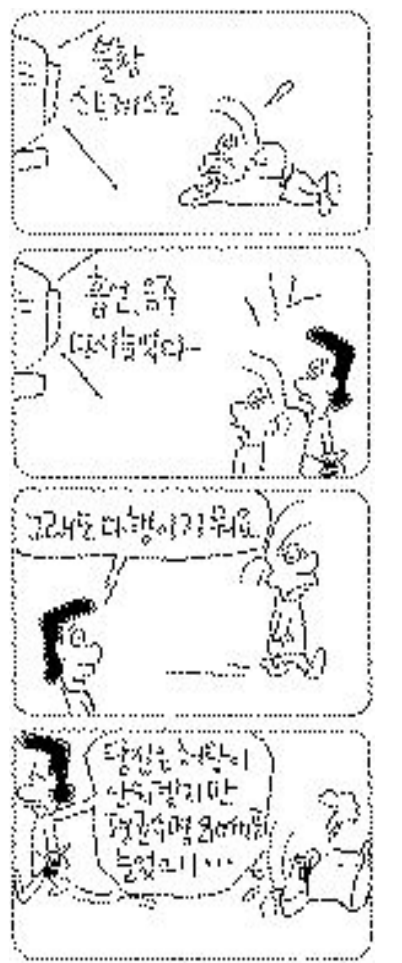
격대비 홍보효과가 크지 않는데다, 내년 경기가 불투명해 소모성 예산을 줄이기로 한 때문이다.

인쇄업체의 연말 '달력 특수'도 옛말이 됐다. 이 지역 달력 제작업체에 따르면 올 달력 주문량이 지난해보다 평균 20~30% 감소했다. 광주에서 D인쇄소를 하는 이모(45)씨는 "지난해에는 20개 업체에서 달력제작을 의뢰했는데, 올해는 겨우 5개 업체 뿐"이라며 "한창 추가 주문을 받을 시기인데, 일이 없어 손을 놀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S인쇄소도 중소기업체와 협회, 개인에게 주문판매되는 달력 주문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달력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976) 김종두



보성 금은방 절도 수사 난항

지난 8일 새벽 4시30분경 보성의 한 금은방에 과한이 침입해 시가 9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보성경찰은 "누군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CCTV에 찍힌 범행장면과 족자·지문 등 뚜렷한 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아이리스 흉내 '대법원에 핵폭탄'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에 핵폭탄을 설치했다며 경찰 112로 합박문자를 보낸 중학교 2학년 장모(14)군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장군은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령실로 '대법원에 핵폭탄이 설치돼 있다. 10분 후에 터진다. 행운을 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

문자메시지가 접수된 뒤 경찰관과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관 80여 명이 3시간에 걸쳐 대법원 건물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장군은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관광버스를 핵폭탄을 설치하는 장면을 보고 장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

/연합뉴스

이청 장성군수 기소

광주지검, 2년간 기자들에 4,800만원 건넨 혐의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0일 지역 축제 때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청 장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5월 지역 축제를 앞두고 지역 일간지와 인터넷매체 기자 23명에게 20~50만원씩 모두 1천630만원을 홍보비 명목으

로 지급하는 등 2년간 40여명에게 4천 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군은 홍보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의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장성군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군수와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조형래 곡성군수 벌금 1천만원 확정

대법, 군수직은 유지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0일 영농조합의 축사를 부정하게 매각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형래 곡성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군수는 선거법 이외 사건의 경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영농조합 임대계약

관련 위증 부분은 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1심과 이를 유지한 2심 판결은 수긍이 가고 재중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당선 전인 2005년 10월 영농조합 법인 임시총회를 열어 당시 대표이사를 제명하고 자신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토록 결의한 뒤 이를 바꾸기로 축사 등 조합 소유의 건물 8채를 4억7천만원에 팔아 이 돈을 법인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로스쿨 소송 상고심에서도 기각

조선대 "추가 인가 요구"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이 10일 상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조선대는 이날 "대법원의 상고 기

각은 항소심을 그대로 확정할 것인 만큼 그 판결 취지에 따라 로스쿨 인가권자인 교과부를 상대로 추가 인가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아울러 소송 당사자로 로스쿨

탈락 대학인 동국대와 함께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월30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과부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남대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는 조선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더라도 처분 등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적용했다. 이 경우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조선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경쟁 관계에 있는 전남대 교수가 로스쿨 대학을 선정하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선정 절차에 하자 있다"며 호남권을 위해 로스쿨을 인가받은 전남대·전북대·원광대·제일대 등의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채희호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UPGRADE' featuring a modern office interior with desks, chairs, and bookshelves. Text includes 'UPGRADE' and '도움'.

Advertisement for '대산프리모남녀가발' (Daesan Premium Men's and Women's Haircuts) featuring a man and a woman. Text includes '남성 헤어 기능장회', '대산프리모남녀가발', '가발', '초슬림!!', '50만원~', and '귀여워 보이고 싶으신가요?'